

요약

독일은 기존 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6년 3월 개인연금 개혁안을 발표함.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익형 노후 대비 계좌 도입, 둘째,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그리고 연금 수령 유연성 확대를 위한 인출 방식 개선 등임. 이번 개혁안은 개인연금 수익률 제고와 가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동 가입 방식의 부재,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방식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됨

- 독일은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리스터 연금의 한계 등을 이유로 개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¹⁾
 - 독일 직장인의 3분의 1은 개인연금 또는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연금 수령자 은퇴 소득의 약 66%가 공적연금 소득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고령화, 낮은 출산율,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는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함
 - 법정 은퇴 연령을 초과하는 고령 인구는 2025년 약 1,760만 명에서 2035년 2,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공적연금은 정부 예산에서 1,280억 유로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시행된 개인연금 제도인 리스터 연금 또한 낮은 수익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2017년 이후 가입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
 - 리스터 연금은 원금 보장 의무로 인해 잠재적 위험이 따르지만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제한됨
 - 최근 주식 등 높은 수익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연금제도는 이러한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25년 독일 주식 투자자는 2024년 대비 약 16.5% 증가한 1,41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2026년 3월 독일 하원(Bundestag)을 통과한 개인연금 개혁안은 기존 개인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노후 대비 계좌(Altersvorsorgedepot)를 도입함²⁾
 - 기존 리스터 연금의 원금 보장 의무로 인한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금 보장 의무가 없는 수익률 중심의 노후 대비 계좌임
 - 가입자는 위험 선호도에 따라 원금 보장 비율을 0%, 80%, 100% 중 선택할 수 있음

1) Deutsche Bank(2026. 2. 19.), "Private pension reform in Germany - a bold move towards capital markets"

2) Deutscher Bundestag(2026. 3. 25.), "Gesetz zur Reform der steuerlich geförderten privaten Altersvorsorge (Altersvorsorgereformgesetz)-BT Drucksache 21/4996"

- 따라서 수익률이 낮은 안전 자산 외 주식 또는 ETF 등 다양한 상품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함
- 또한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연간 효과비용(Effektivkosten)³⁾을 운용자산의 1% 이내로 제한하는 표준상품을 도입함
 -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은퇴 5년 전부터는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은퇴 직전에는 30% 이하로 낮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함

○ 또한 개인연금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을 단순하고 투명한 납입액 비례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연금 수령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수령 기간 조정, 인출 방식 변경 등을 도입함⁴⁾

-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의 최소 4%를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정해진 금액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액 급여 방식이었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소득에 맞춰 납입액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최소 자기부담금 납입 규정을 폐지하고 납입액 비례 방식을 도입했으며, 첫 납입액 360유로 이하까지는 납입액의 50%, 360유로 초과 1,800유로 이하까지는 납입액의 25%의 보조금을 지원함
- 또한 연금 수령의 유연화를 위해 종신연금 형태 이외에도 최소 85세까지 연금을 나누어 받거나 은퇴 시점에 최대 30%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2027년 시행 예정인 동 개혁안은 개인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동 가입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고, 정부 보조금이 소득수준이 아닌 납입액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됨⁵⁾

- 이번 개혁안은 자동 가입 방식(Opt-out) 대신 자발적 가입 방식(Opt-in)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지적됨
 - 일반 소비자에게 노후 계획이나 연금 가입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일수록 개인연금 가입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유럽연합위원회(EC)에서 연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 가입(Auto-enrolment) 제도를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국, 폴란드에서는 동 제도 도입 후, 연금 가입률이 상승함
- 또한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을 납입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이는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됨
 - 기존 리스터 연금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입액이 커지는 구조였으나 개혁안에서 동 규정이 폐지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이 사라짐

3) 효과비용(Effektivkosten)은 총비용이 연간 수익률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전혀 없으면 연 5% 수익이 가능하고, 비용 차감 후 실제 수익률이 연 3.8%라면, 효과비용(Effektivkosten)은 연 1.2%p임

4) Deutscher Bundestag(2026. 3. 25.), "Gesetz zur Reform der steuerlich geförderten privaten Altersvorsorge (Altersvorsorgereformgesetz)-BT Drucksache 21/4996"

5) Deutsche Bank(2026. 2. 19.), "Private pension reform in Germany - a bold move towards capital markets"